

Hot Issue & Cool Vision

2004/11/09

미국 대선 이후의 중미관계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차례

1. 베이징이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2. 미국 대선 이후 중미관계 전망
3.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내용 문의 :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e-mail kifs@kifs.org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연구원

미국 대선 이후의 중미관계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베이징이 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을 앞둔 11월 1일 아침 북경에서 받아 본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에는 전 외교부 부장 첸치천이 부시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실려 있었다. 외교부장, 부총리, 중국공산당 정치국원 등의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기명으로 부시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실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글 자체는 이미 지난 10월 중국의 다른 매체에 발표된 글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관영지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 데일리가 미국 대선을 겨냥하여 다시 발표한 것은 중국 정부가 부시의 재선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국무부는 이 글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언론 매체에 그 잘못을 전가하였다. 사실 전후의 사정을 보면 이 글의 발표는 현재 중미관계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기보다는 캐리의 당선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보험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미국 대선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며칠 동안 중국에서 만난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특별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국의 언론매체들도 미국 대선의 전개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을 주로 다루었으며 특별히 어느 후보에게 경도된 인상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태도는 미국 대선 결과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심을 보였던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972년 이후 유지되어오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가 1989년 천안문사태와 1990년대 초 냉전체제의 붕괴로 약화된 이후부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중국문제가 중요 이슈로 등장하고 중국은 이에 민감하게 대응하였던 것과도 뚜렷이 대비된다.

1992년 선거에서는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부시 당시 대통령의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온건한 입장을 공격하고 취임 이후 중국의 인권문제와 무역정책을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클린턴 정부의 임기 초반 미중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으며 클린턴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부터 정상화되었다. 그리고 2000년 선거에서는 부시 현대통령이 중국위협론을 등에 업고 클린턴 정부가 추진하였던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비판하며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규정하였다. 즉 선거 때마다 중국문제는 후보자가 당선자를 공격하는 주요 무기가 되었으며 중국도 선거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중국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않으면서 중국은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1년 9·11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중점이 성장하는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군사대국에 대한 견제에서 반테러전쟁으로 이동하고 이를 위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후보자 사이의 TV토론에서도 중국문제는 북핵문제보다도 훨씬 비중이 낮게 다루어졌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파월 미국 국무부장은 “현재 미중관계는 1972년 닉슨의 방중 이후 가장 좋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증가에 따른 자신감의 증가도 중국이 미국 대선에 냉정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의 서민이나 일반 지식인의 경우 부시보다는 케리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는 주로 이라크전쟁 등 부시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라크전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로 견지하였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부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외부의 시각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선거를 앞두고 천지천의 글을 다시 발표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이라크와 같이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게 없는 문제보다는 대만문제, 경제협력, 인권문제 등이 더욱 직접적인 관심 사항이며 부시의 재선이 현재 안정적인 중미관계, 특히 대만문제와 관련한 미국정책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케리의 당선은 미국의 대만정책에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인권문제,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대해 더욱 비판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이러한 점은 현재 중국 외교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장기적으로 중미관계는 이번 미국 대선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누가 미국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클린턴이나 부시 모두 경선과정과 임기초반에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정책성향을 보여주었으나 점차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부시나 케리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2. 미국 대선 이후 중미관계 전망

그러나 부시나 케리 모두 중미관계의 기초를 크게 변화시킬 수 없고, 특히 그 중에서도 중미관계를 중시하였던 부시가 대통령에 재선되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중미관계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의 불확실성은 2004년에 들어 다시 증가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국 신화사에서 발행하는 랴오왕(瞭望)에 실린 미국대선을 전망하는 글에서는 중미관계가 이미 하향세로 접어들었으며 대선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 강

화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반테러전선에 가려졌던 중국과 미국의 갈등 요인들이 점차 수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대만정책의 변화가능성이다. 11월 5일자 차이나 데일리 사설에서는 부시의 재선을 축하하면서도 “미중 공동선언이 마련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건전한 상호관계 발전을 위한 보증수표”라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건히 고수해야 하며 ‘대만독립’을 지지하는 어떤 시그널도 쥐선 안된다”고 못을 박고 이 문제가 중국의 향후 중미관계에서 가장 커다란 관심사를 점을 명확히 하였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미국은 모두 양안관계의 현상유지를 바라고 있다. 문제는 대만이 양국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 재선에 성공한 천쉐이벤은 공공연히 2008년 이전에 국호변경 등 대만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대만이 점차 독립선언이라는 마지노선을 돌파하려고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대만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아젠다로 등장하고 있다. “전략과관리(戰略與管理)” 2004년 1호에 실린 옌쉬에통(閻學通)의 논문에서는 대만에 대한 선제 무력공격을 통해 대만의 독립추구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를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대만의 움직임으로 고려하면 중국의 무력사용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대만의 독립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력사용을 통한 양안문제의 해결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도 민주주의적 정치발전이 이루어진 대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만방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틀에 쉽게 합의할 수 없다. 작년까지는 중미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고려하며 대만문제에 대해 부시 행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나 대만해협의 긴장고조 등을 이유로 올해 대만에 대해 대규모 무기판매를 시도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과거에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민감한 시기에 무기판매를 시도하는 것은 대만의 독립추구를 더욱 고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상호불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반테러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인민폐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 무역마찰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983년 3억 달러에서 2004년 12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중국은 2000년 일본을 초월하여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2003년 미국의 총무역적자의 23%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였다. 물론 중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대미무역흑자는 586억 달러로 무역 흑자규모 자체가 미중 사이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무역흑자의 규모와 관련한 논란과 관계없이 최근 10여년 동안 중국의 대미무역흑자의 급속한 증가는 중국을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의 주요 타깃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교역이라는 비판에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인민폐의 저평가를 통해 무역흑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부르고 있다. 올해 6월에 열린 미국 상무부의 중국 시장경제 지위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일부 기업과 노동운동세력이 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에게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나 당시 미국의 반대로 향후 15년 동안 반덤핑제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비시장경제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상품에 대한 덤핑제소국은 중국 내 가격이 아니라 다른 대체국의 가격을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중국의 불공정무역 행위로 미국 내에서 약 27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은 당장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인민폐를 절상하는 것은 경제정책에 대한 자주권의 침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며,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 변동환율제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등의 도입도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원자재 수입 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무역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양보의 폭도 적다. 따라서 무역마찰 문제는 부시 임기 내에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마찰이 당장 중국과 미국의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부시는 여전히 이라크 등 중동 문제에서 받을 뼈기 어려울 것이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중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에너지 문제 등으로 과거보다 더욱 증가하였지만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이유로 미국과 대치할 이유는 없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해 준다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다.

현재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 중의 하나는 새로운 행정부에서 네오콘 및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임기 중 중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내각의 구성에서 이들 세력이 강화된다면 이는 곧 대만문제의 악화로 연결되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을 예상보다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3. 중미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즉 부시의 재선 이후 중미관계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지

만 동시에 불안 요인은 향후 2,3년 동안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협력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의 돌발적인 행위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북핵 문제가 파국적인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만 문제로 인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증가한다면 이러한 협력구도가 약화되고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시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고 중국과 미국의 협력구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북핵문제에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마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의 증가함에 따라 중국의 무역수지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한국과 같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서 손해를 만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수입개방과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것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한국의 국내정치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문제로 미봉책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더욱 투명하고 제도화된 교역관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1월 9일 미래전략연구원>